

공정위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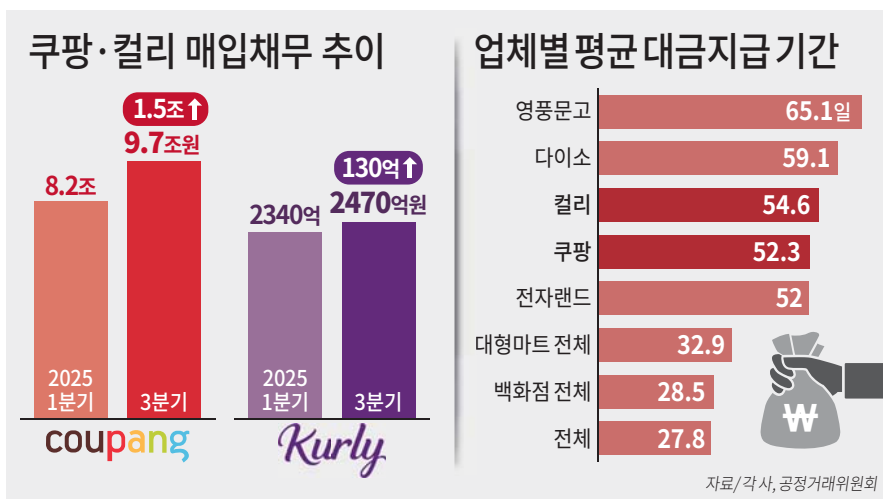
# 직매입 30일·특약매입 20일… 유통업체 정산기간 대폭 단축

업계 ‘늑장 정산’ 관행 정조준  
일각선 ‘규제의 역설’ 우려 제기  
“수수료 인상 등 부작용 경계해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유통업계 늑장 정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대금 정산 기한 단축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업계에서는 이번 규제가 오히려 중소 납품업체 판로를 위축시키는 ‘규제의 역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8일 공정위는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초 법률 개정 방안을 설명했다. 1년 유예를 두고 유통업체가 상품을 직접 사들이는 직매입 거래는 현행 60일에서 30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활용하는 특약매입 등은 현행 40일에서 20일로 각각 지급 기한이 단축된다.

공정위가 정산 기한을 30일로 줄인 건 대다수 유통업체가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유통업계 평균 대금 지급일은 27.8일(직매입 기준)로 30일 이내다. 또한 위수탁 거래와 달리 직매입은 상품 수령 즉시 납품업체의 의무가 종



료되고, 소유권이 유통사로 넘어가는 특성을 고려해 검수 등 최소한의 행정 기간을 포함한 30일을 법정 지급 기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풍문고(65.1일), 다이소(59.1일), M촌점점·메가마트(54.5일), 컬리(54.6일), 쿠팡(52.3일), 전자랜드(52일), 홈플러스(46.2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40.9일)은 유통업계 평균보다 긴 지급일을 보였다.

법정 상한선(60일)을 꼭 채우며 지급한 기업들은 정산 기간 단축 시 자금 흐름에 타격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더 빠른 기간 내에 대금을 지불하게 되는 만

큼 매입채무가 줄어들면서 가용해야 할 현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매입채무는 기업이 상품을 매입한 후 지불하지 않은 외상값을 의미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 정산 주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며 “정산주기 단축으로 인해 현금 보유량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운영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의 올해 3분기 매입채무는 약 67억9500만 달러(약 9조 7000억원)로 전체 부채액 139억2700만 달러 중 48.8%에 달한다. 컬리는 3분기 매입채무가 약 2470억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2209억원보다 많아 단기적인 자금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개정된 법안이 대기업 독과점을 심화하고 소상공인에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양면시장의 특성을 가진 플랫폼 특성상 규제 비용이 입점 업체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온라인 시장은 다수의 영세 판매자가 긴 꼬리를 형성하는 ‘롱테일 법

칙’이 적용되는데, 급격한 정산 단축은 플랫폼으로 하여금 관리 비용과 반품 리스크가 높은 하위 판매자들을 정리하고 대형 판매자 위주로 거래를 재편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현장에서 일부 플랫폼의 늦은 정산으로 불만이 컸던 만큼 기간 단축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확실적인 규제가 자칫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 전문위원은 “플랫폼이 위험 관리를 명목으로 입점 문턱을 높이거나, 영세한 하위 사업자와의 거래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며 “유동성 확보에 따른 부담이 수수료 인상 등 다른 형태로 소상공인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 퇴직금 미지급에 블랙리스트까지 유통업계 노동환경 개선 ‘공회전’

쿠팡, 올해만 근로기준법 99건 위반  
상당수 행정종결… ‘숨방망이’ 논란

국회의 반복된 지적에도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만 근로기준법 위반 99건이 새로 적발된 데 이어, 퇴직금 미지급 신고 사건 상당수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행정종결 처리되면서 ‘숨방망이 감독’ 논란도 불거진다.

29일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쿠팡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99건으로 집계됐다. 계열사별로는 쿠팡CLS가 62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CFS 29건(29.3%), 쿠팡 본사 8건(8.1%) 순이었다.

위반 유형은 퇴직금 등 임금 지급과 관련한 ‘금품 청산’ 위반이 82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쿠팡CLS가 57건(69.5%)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불거진 쿠팡CFS에서도 19건(23.1)이 적발됐다. 이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위반이 10건 확인됐다.

최근 5년간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311건에 달한다. 반면 동종 업계의 위반 건수는 CJ대한통운 12건, 롯데글로벌로지스 9건, 한진 4건에 그쳐, 쿠팡의 위반 규모가 경쟁사 대비 약 3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의원은 “수많은 물류·택배 대기업 중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지난해 말 국회 지적에 따른 노동부 감독 이후에도 위반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는 점은 쿠팡이 그동안 ‘노동환경 개선’을 공수표처럼 반복해 왔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위반과 맞물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대부분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행정처분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노동부에 접수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신고 사건은 총 220건에 달했고, 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한 평균 처리 기간은 58일로 집계됐다. 처리 결과를 보면, 행정종결이 195건(8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소는 9건(4%)에 불과했다.

블랙리스트 관련 신고 역시 유사한 양상이다. 최근 5년간 접수된 블랙리스트 신고는 총 19건으로, 현재 처리 중인 사건을 제외하면 평균 처리 기간은 29일이었다. 처리 결과는 행정종결 17건(89.4%), 처리중 2건(10.5%)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쿠팡CFS가 17건(84.2%)으로 가장 많았다.

안 의원은 “최근 블랙리스트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신고사건 대부분을 ‘행정종결’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특히 최근 지연되고 있는 신고사건들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보다 속도감 있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해보려는 그 순간이 이미 센스니까**

난방할 때는 문을 꼭 닫기!! 20℃ 겨울철 적정온도 20도 준수하기!! OFF 안쓰는 제품 전원 끈기!!

난방은 이십(20)~도 일단 해보는거죠~

중요한 건 하려는 마음이니깐!

**지구를 살리는 에센스**  
**당신의 에너지 센스**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동서발전주